정수복의 '응답하는 사회학'

애국심과 시민의식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6주에 걸쳐 매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벌어진 촛불 집회의 힘이다. "어둠을 탓하기에 앞서 작은 촛불을 들라!"는 말이 있지만 그 작은 촛불 수백만이 모여 어둠을 밝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정부, 의회, 사법기관, 기업,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라는 6자 사이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의 내용이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주권을 가진 국민이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을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사법기관은 국민들의 선거가 아니라 고시를 통해 선발된 법관들로 구성된다. 기업은 시장의 영역에서 합법적 이윤을 추구한다. 언론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주요 사건을 보도하며 공적 의제를 형성한다. 시민사회는 건전한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로 이루어지며 공론을 형성하며 공익을 추구한다. 이 6자가 각자 자기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할 때 민주주의는 건강하게 살아 움직인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1987년 이전까지 파행을 거듭했다. 헌법을 개정하면서 부정선거를 통해 장기 집권하던 이승만 정권은 4·19로 붕괴했고, 제2공화국의 장면 내각은 5·16 군사정변으로 와해되었다.

1963년 제3공화국이 시작되었지만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헌법을 제정해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유정회를 만들어 국회를 행정부의 시녀로 만들었다. 그것이 4공화국이다. 1980년 광주항쟁 이후 집권한 군부에 의해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5공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87년 6월항쟁의 결과 다시 대통령을 국민이 직선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6공화국이 시작되었다.

이후 대통령 직선은 거부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최소 원칙이 되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대통령 직선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 말한 6자의 견제와 균형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1948년 건국 이후 정부는 의회와 사법부를 자신의 보조기관이나 시녀로 만들어 왔고 언론의 자유를 구속했으며 기업과 유착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민사회의 성장을 막았다.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한 유신체제야말로 왜곡된 6자 관계를 결정적으로 굳혔다. 그 시기에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과 규제를 통해 대기업을 육성하면서 정경유착이라는 관행을 만들었고, 언론을 통제하며 대통령과 체제의 권위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저항을 억압했다. 전두환 대통령이 지배한 5공은 그런 유신체제의 후속편이었다.

6공이 시작되면서 시민운동단체들이 태동했고 1990년대는 한국 시민운동의 황금기였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비롯해 여러 시민단체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지도자들이 개혁 정부에 참여하기 위해 장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의 영역으로 진출하면서 시민사회의 리더십은 축소되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고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시민운동의 활력은 점점 더 약화되었다.

노무현 정부가 추구하던 사법개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부는 청와대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한 대기업들은 점차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였지만 정경 유착의 관계를 떨쳐버리지 못했다. SNS를 비롯해 직접통제가 불가능한 의사 소통의 수단이 확대되었다고 하지만 주요 일간지와 종편을 중심으로 하는 언론은 건강한 공론 형성의 장이 되기에는 미흡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공개되고 대통령의 비리가 폭로되면서 촛불 시위가 7주 이상 계속된 것이다.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앞서 말한 6자관계를 바르고 굳건하게 세울 중장기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우선 다가올 대선에서 능력과 비전을 갖춘 민주적 리더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한다. 그 후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의 과다한 권한을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견제하고, 정부와 기업 사이의 부패 고리를 끊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의 비판적 여론형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시민 의식과 시민 참여의 활성화다. 평시에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만 민주적인 공적 질서가 위협받을 때면 분연히 떨쳐 일어나 행동하는 시민이 없었다면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태극기를 앞세운 애국심도 중요하다. 그러나 시민 의식 없는 애국심은 맹목적이고 위험하다.

물론 애국심 없는 시민 의식은 공허하다. 촛불 시위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권리 의식과 비판 의식을 갖춘 시민들이었다. 책임 의식을 갖춘 애국시민들이 정의감으로 살아 움직일 때 건강한 6자관계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학자·작가〉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커피 한 잔

완장질에 대하여

조 경 완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누렇게 빛 바랜 채 아직도 내 책꽂이 뒷줄(잘 안보는 책은 뒷줄이다)에 박혀있던 80년대 소설 '완장'을 꺼내 다시 읽었다. 혼자 많이 웃었다. 정읍출신 작가 윤흥길의 그 기가 막힌 풍자…해학….

땅 투기로 돈을 번 최 사장은 저수지 사용권을 얻어 양어장을 만들고 그 관리를 동네 건달 종술에게 맡긴다. 쥐꼬리 월급이지만 완장(腕章)을 차고 일한다는 말에 눈이 번쩍 뜨인 종술은 저수지 관리인으로 취직한다. 노란바탕에 파란글씨로 '감시원'이라 박힌 완장! 그 서푼어치 권력을 찬 종술은 도시에서 낚시질 온 남녀들에게 기합을 주기도 하고 몰래 고기를 잡던 국민학교 동창 부자를 두들겨 패기도 한다. 완장의 힘에 푹 빠진 종술은 읍내에 나갈 때도 완장을 두르고 활보한다.

빈천한 처지에 놓여 있다가 작건 크건 권력을 손에 쥐게 된 후 표변해 포악질을 일삼는 인간의 속물근성을 이렇게 잘 묘사한 글도 없겠다. 소설이 나온 때가 전두환 군사독재의 한복판인 1983년. 도처에 완장질이 횡행하던 시대 아닌가. 좌충우돌하던 종술은 관리인 직에서 짤리고 난 뒤에야 '완장의 허황됨'을 일깨워주는 술집 작부 부월의 충고를 받아들인다. 부월의 말은 어느 현자의 그것보다 핵심을 꿰뚫는다 "눈에 뵈는 완장은 기중 벨 볼일 없는 하빠리들이나 차는 게여…" 종술은 완장을 저수지에 던져버리고 부월과 밤 봇짐을 싼다.

기실 완장은 죄가 없다. 2차대전 중 레지스탕스들은 유니폼을 따로 구할 수 없어 왼팔에 천조각으로 완장을 찼다. 캡틴 박지성이 플레이어들을 독려하며 그라운드를 누빌 때 맨 노란색 암 밴드는 자랑스런 것이었다. 부모를 여의고 비탄에 빠진 상주가 왼팔에 두른 삼베 완장은 경건과 삼감의 표식이다. 혹한 속 비무장지대 철책선을 지키는 육군 수색대는 정규군이면서도 '민정경찰(DMZ POLICE)'이라는 거짓 완장을 차고 임무를 완수한다.

그러나 완장에는 종술이가 찬 무뢰배의 이미지가 훨씬 강렬하다. 1940년대 하켄크로이츠(갈고리십자가) 완장을 하나씩 두른 나치스 청년들은 유태인들을 린치했다. 누런 군복에 흰 광목완장을 두른 일본헌병은 가가호호를 뒤지며 놋그릇을 쓸어갔고 정신대 소녀들을 나꿔채갔다. 중국 문혁(文革)때 홍위병 소년들이 두른 붉은 완장은 섬뜩했다. 스승이건 동네에서 존경받던 의사건 홍위병들은 달려들어 조리를 돌렸다.

우리나라의 완장도 대단했다. 인공(人共)때 한밤중 횃불을 둘러 밝힌 인민재판장에는 눈에 핏발이 선 머슴과 소작인들이 죄다 붉은 완장을 차고 있었다. 반동분자로 판결난 지주의 등에 죽창을 찔러 넣던 자들의 팔에도 완장이 둘러졌었다. 3·15 부정선거 때 서북청년단 각목부대들은 완장을 차고 투표소마다 몰려다니며 항의하는 야당인사들을 후려 팼다. 5·16 쿠데타 때 박정희 일파는 피아식별을 위해 흰 바탕에 검은 한자로 '혁명군'이라 박은 완장을 찼다.

역사적 경험을 들지 않더라도 7080 세대들은 등교길 교문 앞에 도열해있는 선도부의 노란 완장을 기억한다. 동급생이면서도 '적발권', '징벌권'을 부여받은 그 친구들의 그 눈빛! 선도부 완장을 찼던 친구는 완장을 벗은 수업시간에도 힘없는 학생을 윽박지르거나 매사에 으쓱대려드는 종술이가 아니었던가.

완장은 먹물스럽게 말하자면 전체주의의 유지도구이면서 급조된 신념의 수호심벌이다. 그 완장을 차고 가소로운 권력을 휘두르려는 심리를 가리켜 '완장질'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완장질은 누구에게나 역겨운 것이다.

며칠 전 촛불집회로 표출된 '탄핵민의'를 조직화 하려는 시도가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불발로 끝난 일이 있었다. 이른바 '온라인 시민의회 대표단'을 뽑겠다는 것이었다. 반발은 신속했다. 젊은 여배우는 "애매모호한 인기투표로 재 뿌리지 맙시다"라고 했고 기특한 남자가수도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요"라고 했다. 가장 귀에 잘 들어오는 반대 목소리는 "그렇게 완장이 차고 싶으면 국회로 가라"는 말이었다. 비난이 커지자 시민대표 운운은 쏙 들어갔다. 참 다행스런 일이라 여기면서도 그 아름다운 촛불바다의 한구석에도 마치 제 세상이 온 것처럼 설치고 싶은 완장심리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 같아 불쾌하다.

이번 일은 완장질로 대표되는 권위주의, 특권의식, 개인이 개인을 통제하고 억압할 수 있다는 의식에 국민 모두가 넌더리를 내고 있다는 방증이다. 완장 찬 저질 인간을 경멸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완장질은 하지 않겠다는 신호다. 부월의 말마따나 완장은 기중 하빠리들이나 차는 것이다.

기 고

에너지 밸리, 혁신을 설계하다

김 상 노
한국전력 경영개선처 부장

사람들에게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타클라라 계곡을 아느냐"고 물어보면 대다수가 고개를 갸웃하겠지만, 그렇다면 "실리콘 밸리를 아느냐"고 묻는다면 처음 들어봤다는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실리콘 밸리'는 전세계 사람들에게 단순한 지명 이상의 의미로, 최첨단의 기술과 혁신의 대명사로 각인되어 있는 곳이다.

하지만 그 실리콘 밸리가 불과 30년전만 해도 와인용 포도를 재배하던 허허벌판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1980년대 중반부터 인근의 스탠포드, 버클리와 같은 명문대 출신의 벤처 기업가들이 열정과 지식,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획기적인 IT 회사들을 설립하면서, 나지막한 포도나무만 무성했던 캘리포니아의 한 촌구석을 전세계 첨단산업의 메카이자 혁신의 성지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한전이 서울을 떠나 빛가람 나주로 내려오는 청사진을 그리면서, 제일 먼저 구상한 사업이 나주를 "에너지 밸리"로 만드는 것이었다. 한전의 "에너지 밸리"를 쉽게 설명하자면, 한전을 중심으로 전력사업에 특화된 Glocal(Global+Local) 산학연 복합단지라고 말할 수 있다.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나주 혁신도시 인근에 모으고, 지역 대학교와 연구소의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한전과의 산학 협력을 통한 에너지 신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관련산업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파괴적 혁신의 시대를 맞이한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전진기지를 건설하는 원대한 계획인 것이다.

에너지 밸리는 지리적이나 역사적으로 실리콘 밸리의 후광을 이어받을 만한 좋은 상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산타클라라 계곡이 금광시대 이후 농업지대로 바뀌어 조금씩 쇠락해 가다가 실리콘 밸리로 다시 부상한 것처럼, 농촌경제가 쇠퇴하면서 예전 '나주목'의 영광을 잃어가던 배나무 경작지에 세계 최고의 유틸리티 기업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주춧돌을 세웠다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물론 에너지 밸리는 이제 겨우 도움닫기의 첫발을 내디딘 단계이다. 관련 기업들의 투자도 초보적인 수준이고, 기술인력의 확보는 상당한 시간과 경험을 필요로 할 것이다. 30년간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경험으로 쌓아올린 실리콘 밸리의 명성과, 첫 돌을 갓 지낸 에너지 밸리를 비교한다는 자체가 민망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시작은 단순한 에너지 '산업단지'의 개발이 아니라 미래 에너지 산업의 혁신을 이끌 새로운 설계도를 그려나가는 작업이다. 오늘의 기술이 서투르고 내일의 시도가 실패해도 에너지 밸리의 미래는 분명히 밝을 것이다.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우리 자신의 능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 Just Try, 그것만이 혁신의 비결"이기 때문이다.

社 說

VIP 비선 시술 확인…세월호 7시간 떠오르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단골로 성형 시술을 받았던 김영재의원(醫院)의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을 몇 차례 치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이날 청문회는 박 대통령이 처방받아 맞은 '주사'의 성격과 목적 및 불법 시술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통령 자문의로 근무한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은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자문의로 위촉되기 전 박 대통령을 진료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두 번인가 세 번 관저에 갔다"고 답해, 공식 임명을 받기 전에 박 대통령을 진료했음을 시인했다. 공식적으로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몸에 손을 댔다는 것은 비선 의료행위로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최순실 씨의 단골병원장인 김영재 원장도 "많지는 않지만 몇 번 (박 대통령이) 피부 트러블이나 순방 후 (얼굴이) 부을 때 갑자기 연락이 와 (청와대) 간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또한 대통령 주치의나 자문의로 임명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대통령을 상대로 의료 시술을 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김 원장은 박 대통령 입가의 멍 자국 사진에 대해서 "필러 자국 같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해당 사진은 2014년 4월 16일 참사 이후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면담을 앞둔 5월 13일에 찍힌 것이지만 통상 안면시술 시 바늘이 혈관을 터트릴 때 나타나는 증상과 관련이 있다. 이는 세월호 참사 당일 의혹에 휩싸인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제 박 대통령이 몇몇 주사를 즐겨 맞았다는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행적은 여전히 의문이다. 우리가 청문회와 특검 수사에 계속 주목하는 이유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새누리당 친박 의원들

새누리당 이진곤 윤리위원장을 비롯해 기존 윤리위원 7명 전원 사퇴를 초래 한 친박(친 박근혜)계 지도부의 윤리위원 충원 사태는 한 마디로 민주적 질서에 역행하는 '폭거'라고 할 만하다. 애초 새누리당 윤리위는 4·13 총선 참패 이후 '당 쇄신 방안의 하나로 만든 조직이다. 위원장을 포함한 윤리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당외인사로 구성함으로써 당내 계파로부터 자유로운 '국민의 윤리위' 취지를 갖도록 했다.

한데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난 12일 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윤리위원에 박대출·이우현·곽상도·이양수 의원과 원외 인사 4명 등 모두 8명을 추가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위원은 모두 주류 친박계로 분류된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징계 결정(20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비주류 수장인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의 출당 작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이 위원장은 다음날인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리성 제고 등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대통령을 보호하는 일에만 급급하다면 그런 윤리위원회는 들러리밖에 더 되느냐"며 사퇴를 선언했다. 다른 윤리위원도 사퇴를 결의했다.

정당이 윤리기구를 두는 것은 국민의 정치 불신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자정(自淨) 노력의 일환이다. 한데 정치 불신 해소는커녕 어떤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윤리위를 변질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법조계에서는 이번 윤리위 파동이 헌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더라도 이번에 충원된 윤리위원 중에는 성희롱 사건으로 공천 탈락한 인사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인사 등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친박의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이런 행태를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답답하다.

無 等 鼓

상과 명예

해마다 노벨상 발표 즈음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상이 있다. '이그노벨상'(Ignobel Prize)이다. '불명예스러운'이라는 뜻의 '이그노블'(ignoble)과 '노벨'(Nobel)의 합성어로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업적'을 이룬 이에 수여한다. 미국 유머 과학잡지 '기발한 연구 연감'이 과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1991년 제정한 상으로 2000년 수상자 안드레 가임은 2010년 노벨상을 받기도 했다.

역대 수상 목록을 보면 기발하면서도 의미 있는 게 많다. 올해 화학상 수상자는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스캔들의 주인공 '폭스바겐'이었다. 상금은 무려 10조 달러지만 짐바브웨 달러이니 미화로 하면 40센트 밖에 안 된다. "소송비에 보태라"는 덕담(?)이 덧붙여졌다.

그밖에 '발의 악취의 합성 과정'(의학상), '욕설 시 고통을 덜 느낀다는 연구결과'(평화상), 불법 주차된 메르세데스 벤츠 승용차를 장갑차로 밀어버린 리투아니아 빌리우스시 시장(평화상)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인으로는 향기 나는 양복을 개발한 연구원이 환경보호상을, 약 3000쌍을 합동결혼시킨 문선명 통일교 교주가 경제학상을 받았다.

아카데미 시상식 전날 발표하는 '골든 라즈베리 시상식' 역시 화제의 상이다. 1981년 시작된 시상식인데 부문별 '최악의 영화'를 뽑는 게 특징이다. 투자자들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는 할리우드에 경고를 날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얼마 전 '한국춤비평가협회'가 선정한 '몬도 가네상'도 눈길을 끈다. 상의 명칭은 세계의 기괴한 풍속을 담은 다큐멘터리 '몬도 가네'(Mondo Cane·1963)에서 따왔다. '몬도 가네'는 '개 같은 세상'이라는 뜻으로 흔히 엽기적인 광경을 풍자할 때 '몬도 가네 같다'는 비유를 사용하기도 한다. 협회는 '무용계 발전을 위한 명목에도 불구하고 그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업이나 인물'에게 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상자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산 조윤선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등 3명이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시상식이 많은 연말이다. 상은 보통 칭찬의 의미로 수여하지만, 따끔한 회초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도 있는 것 같다.

/김미은 문화1부장mekim@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 편 집 부 220-0649 / 정 치 부 220-0632 / 사 회 부 220-0642 / 사 회 2부 220-0652 /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 문 화 부 220-0661 / 문화미디어부 220-0664 / 체 육 부 220-0697 /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 디 자 인 실 220-0536 /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